

# 민주, 당직 개편... 친문·비명 전진 배치

## 최고위원에 송갑석 임명 임선숙은 최고위원 사임 “통합과 탕평, 안정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 정책위 의장에 김민석 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

당직 개편 등 쇄신 요구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친문(친문재인)계와 비명(비이재명)계를 상당수 기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이끌 사무총장은 조 정식 의원이 유임됐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해 당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당대표가 지명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지명직 최고위원회에는 비명계 재선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임명됐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날 사임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명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첫 과제로 삼겠다”며 “민심에 따라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 말하겠다. 승리하는 민주당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와 함께 당 3역으로 불리는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이 임명

됐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재선의 김성주의원이 임명됐다. 지난 대선 당시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계파색이 열리는 평가를 받고 있고,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소속이다.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계 재선 한병도 의원이 임명됐다.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 자리는 박상혁 의원(조선)이 맡게 됐다.

대변인단도 교체 폭이 컸다.

수석대변인으로는 권철승 의원(재선), 대변인으로는 강선우 의원(조선)이 임명됐다. 권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친문계다. 강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다.

기존 대변인단 가운데는 박성준(조선)·한민수 대변인만 유임됐다. 안호영 의원(수석 대변인)과 김의겸, 임오경 의원, 황명선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또 이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남국 의원(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문진석 의원(전략기획위원장) 등도 교체됐다.

다만 내년 총선 공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교체 여부가 주목받았던 사무총장직은 조정석 의원이 유임됐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조 사무총장은 5선으로서 그간 일을 잘해왔고 사무총장으로서 안정을 추구하고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책임자라는 표현이 많았다. 중량감 있고 안정을 위해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尹 “양곡관리법, 당정 긴밀 협의해 의견 모아달라”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정대철 신임 행정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다”며 “양곡관리법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최일수·토론자수 협의 시작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운영 방식 교섭에 들어갔다. 전원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원위 운영 방식을 협의했다.

여야는 전원위 토론에 나설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 특정하지 않고 자유 형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전재수 의원은 “18명이 토론할지 9명이 할지 10명이 할지는 의원들 신청을 받아

보야 안다”며 “특정하지 말고 하자는 얘기도 있고, 좀 더 충분히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원위를 총 몇 차례 소집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5~6일을 중심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영주 부의장은 “늦어도 4월15일 전에는, 정개혁위가 2주만 해도 합의할 시간이 없으니 의장이 ‘(전원위원회)를 가급적 연이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정을 만들어 의사국에 넘겼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김진표 의장 “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 선호”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은 27일 선거제도와 관련,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도농복합형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수도권이나 광역자치단체 대도시에서 3 내지 5인을 뽑게 되면 한 사람이 한 명에게 투표한다”며 “현재 득표율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 제3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한 정당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



해 정치 독점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 정당의 표가 분산되니까 소수정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는 집중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30일부터 시작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현행 소선거구제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폐해를 지적했다. 상당수 전문가나 일반 국민 90%가 선거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 이후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스시

## 여 “국민 호도 우려” vs 야 “시행령 바로잡아야”

### 국회 법사위, 검수완박 공방 한동훈 “민주당이 사과해야”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현재의 결정을 강조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현재의 결정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전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꿈수 위장탈당’에 의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며 “만약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이 최종판결하도록 돼 있다. 현재의 판결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바로 가는 것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다수당이기에 어떤 어떤 방식을 써도 법안 통과시키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께서 걱정하실 것”이라고 동의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현재에서 각하된 것을 두고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며 질타했다. 또 여당이 현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현재가 각하한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하며 “한 장관께서 오관을 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국민에게 일단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하는 위험,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고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의) 결정이 일부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게만 제한된 결정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울러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서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 및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김의겸 의원은 “용산에서 (정순신 사태) 인정하고 사후에 한 장관께서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게 말씀하시지만 왜 유독 인사검증에 관해서는 이토록 소극적으로 발언하시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도 “윤 정부에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는 분야 1, 2위로 인사검증이 계속 나온다. 이것을 고치라는 국민들 요구가 있는 것”이라며 “본업에 충실하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